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위한 2015년도 주요 정책방향

이 석 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소위 셰일 가스 혁명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바탕으로 ‘제조업 르네상스’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5개의 제조업혁신연구소들을 연결하는 ‘국가혁신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새로운 제조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복귀 (re-shoring)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함은 물론, 첨단설비 집중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TPP, RCEP 등 경제자유협정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노력도 전개 중이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사오미와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창조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독일은 기술개발, 기술인력 확보, 해외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통해 하든 챔피언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기존의 대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엔화 가치의 지속 하락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 신흥국 추격이 가시화 되면서 우리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여전하여,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데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 대량 생산 위주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기존의 추격형 성장모델을 버리고 창의성과 혁신적 기술, 융복합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015년은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우리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기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선 두 가지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 경제혁신의 발을 깔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면 “역동적인 혁신경제”는 경제혁신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경제혁신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첫 번째 핵심과제는 ‘창의’가 살아 숨 쉬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존의 분절적 창조경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인 창조경제생태계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전국, 전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기업과 1: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소자동차, 제로에너지 마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유통 허브 구축 등 지역별로 창조경제 시범·실증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센터를 통해 아이디어 수준과 숙성 단계별로 법률-금융-마케팅-해외진출 등 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혁신센터 내에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상주하며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파이낸스 존’도 설치된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 사업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올해 신설되는 공영TV홈쇼핑 및 우체국 쇼핑 등을 통한 마케팅은 물론, KIC(Korea Innovation Center) 및 혁신센터별 대기업 연계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연계 유치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빠른 시가 내에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자원을 총체적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혁신센터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멘토 풀(pool) 및 아이디어 등록관리 시스템을 공유하고,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통합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등 기존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장 협의회’ 등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시제품 공동 제작, 공모전 공동 개최 등 각 지역별 혁신센터간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를 지난해 4개 지역 1천 6백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17개 지역 6천억원 규모까지 늘리는 등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내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새롭게 제안되는 아이디어가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담 멘토단도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민간이 자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허브이자, 기존 산업의 창조산업화를 위한 시범·실증사업의 추진 기반으로서 ‘특화형 거점’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선도 벤처기업들이 밀집된 판교에는 창업 및 ICT혁신 인프라 구축, 게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등

혁신적 창조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창조경제밸리’가 구축되고, 산학연 융합연구와 사업화의 거점으로서 서울 홍릉 일대에 ‘글로벌 창조지식과학단지’가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매년 개최되는 ‘창조경제박람회’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창조경제생태계 기반 위에서 ‘기업’이라는 주체들이 역동적으로 탄생, 성장하고 뿌리내리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창업-도약-성장’과 ‘글로벌화’까지 지원하는 ‘현장 체감형 지원 대책’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OECD 34개국 중 최하위인 기회형 창업 비중을 늘리는 등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창업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청년, 대학생, 연구원, 퇴직기술자 등 창업자 특성에 따라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및 청년인턴제를 통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제작, 시장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밀착 지원하는 기반이 갖추어진다. 서울 역삼동 일대는 '17년까지 엔젤투자사와 160여개의 창업팀이 공동 입주하는 ‘하이테크 창업캠퍼스’가 설치되어 기술창업과 벤처창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되며, 입주팀별로 R&D, 투자비용 등을 패키지로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창업캠퍼스는 마루 180, 디캠프 등 민간의 선도적 창업 엑셀러레이터를 비롯해 오는 9월 완공되는 구글 캠퍼스 등과 연계하여 실리콘밸리식 창업 환경을 갖춘 ‘Start-up Valley’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4~7년차의 도약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부 지원대책의 사각지대 속에서 사업화와 시장진입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R&D, 사업화, 융자는 물론 제품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R&D 투자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약 1,600억원까지 확대하고, 창업기업의 시설 및 설비투자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3% 내외의 저리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디자인·금형 개선→해외현지화R&D→양산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순환 단계별로 총 2조원에 이르는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한다. 양산에 성공한 창조적 혁신제품은 공영TV홈쇼핑, 한국판 도큐멘즈 등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플랫폼을 판로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수요조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에서 적격심사방식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강화해 나간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들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지원 대책들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분법적

법령들도 차차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본격 육성한다. 그간 정부가 운영했던 ‘지역형 강소’, ‘글로벌 강소’, ‘월드클래스 300’(이상 ‘중기청’), ‘글로벌 전문기업’(산업부)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글로벌 도약→글로벌 성장’의 2단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지원 시책들을 연계해 다각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가칭)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조경제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생업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과 접목하고 대기업과 협업하는 ‘문래동 철공소 골목’의 사례와 같이 이른바 ‘문래동식 창조경제 모델’을 확산해 나가기 위한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를 지난해 8개에서 올해 전국 2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준비된 창업→안정적 성장→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들도 도입된다.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창업과밀지수 등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사관학교’도 운영하며, 성장단계에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창업 이후의 소상공인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폐업 이후에는 사업정리 컨설팅은 물론, 취업알선 및 정착까지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도 제공된다. 전통시장은 ‘골목, 문화관광, 글로벌명품’의 3대 유형으로 차별화하고, 개성 있는 특성화 시장으로 '17년 375개까지 발굴 및 육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창조경제와 선도형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창의와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성장사다리, 모태펀드 등 투자자금 약 3조원을 집행하고, 지역 유망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6천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혁신센터 펀드’도 조성한다. 더불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中企 패스트트랙’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자금 회수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중기 M&A 특화 증권사(IB)’를 중점 육성하고, ‘중기 M&A 펀드’ 조성, 벤처·중소기업 등 비상장 법인 주식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K-OTC 2부 신시장’ 조성도 추진된다.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유망서비스업 등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통해서도 '17년까지 3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도 지난해 6.5조원에서 올해 10.5조원까지 확대하는 등 통합산업은행의 투자기능도 더욱 강화된다. 또한, 대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술금융 3.0’을 추진하여, 금년 중 기술신용평가(TCB) 대출을 통해 3만 2천건,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

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기술기반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특허권 등을 제품·서비스 생산이 아닌 거래, 평가, 컨설팅 등 여타 사업모델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도 육성한다.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한 대책도 활발히 추진된다. '14년 2월 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연대보증 면제를 '12년 1월 이후 창업한 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산보증료 감면, 연대보증 면제기간 폐지 등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재창업 기업의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를 연기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창업을 지원하는 신규자금 공급도 향후 5년간 최대 1.5조원까지 확대된다. IT와 금융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 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우선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Active X 제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등 금융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플랜도 마련된다. 또한, 미래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자금지원, 행정·법률자문, 애로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벤처캐피탈 및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산업 지원자금도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수적 금융관행 혁신,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도 병행한다.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금융개혁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혁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에서도 ‘감독·검사’ 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수적인 금융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할 수 있는 은행 내부 평가체계 구축, 정책 자금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비롯해, 금융인 사기 진작을 위한 ‘금융의 날’ 제정도 추진한다.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기존 산업과 ICT를 융합한 시범사업, R&D 등 ‘창조비타민 2.0’을 지난해 57개에서 올해 90개까지 확대하고, ‘제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 도입되는 ‘스마트공장’도 올해 1천개를 시작으로 '17년 4천개, '20년 1만개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주력산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스마트, 친환경 등 핵심소재 부품 개발에 '17년까지 2천4백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스마트카, 친환경 LNG 추진선 등 산업별 차세대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다. ICT 분야에서도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 올해 7천4십억원을 투자하고, ICT R&D 기획에서 지원까지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Fast-Track”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5G 기술개발도 추진되며, 기기인터넷도 '17년 전국 90%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우리 ICT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전략을 담은 ‘ICT

경쟁력 강화 종합전략'도 마련된다.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파워를 활용한 신산업, 신시장 창출 노력도 계속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서 IoT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전통제품 제조업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센서기업 등과 IoT 혁신센터를 연계하는 'IoT 글로벌파트너십'도 확대한다. 또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증 및 실용화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도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50개까지 확대하고,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도 지난해 보다 2배가량 증가한 2천억원 규모로 조성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여부를 사전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이 외 민간 전 분야의 주요시설과 다중이용 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안전대진단' 실시, 정부 및 주요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간 핫라인 구축, IoT 융합보안 실증사업 등 '사이버보안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ICT 기술에 기반한 주력사업의 스마트화는 물론, 바이오, 환경, 나노 등 미래 신산업 및 신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산업 원천기술 확보도 본격 추진한다. 특히, 태동기인 미래 바이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약 5천6백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17년 세계시장 톱 10 진입을 목표로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융합의료기기를 집중 개발하고, 치매 조기진단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임상·인허가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기업-병원간 R&D 연계협력을 확대하며,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유망 신제품의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품목별 인허가 전담도우미도 지정할 계획이다. 바이오 제품의 생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금융투자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 37개국의 시장 정보 통합 제공도 추진한다.

현실화 된 기후변화 문제를 기회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에도 올해 약 1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저소비,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20년까지 매출 216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 기술경쟁력 세계 1위 대비 93% 달성을 목표로 태양전지, 이차전지, CO2 포집·처리기술 등 핵심기술과 산업모델도 중점 개발한다. 개발 기술의 실증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도 올해부터 충북 진천 일대에 착공된다. 그 밖에 민간 주도의 시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리스(lease)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차 활용여건이 용이한 제주시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소도 확충한다.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나노 기술은 물론, 국민안전 확보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나노 분야에서는 '20년 세계 2위 나노산업 강국을 목표로 소자, 센서 등 7대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천억원 창출을 목표로 하는 올해 5천8백억원 규모의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재난안전 분야는 구난용 신기술 개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 패키지 실증, 교통·의료 등 주요시설의 소프트웨어 안전진단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R&D, 실증, 신시장 창출을 다각적으로 촉진해 나갈 계획이

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미래 원천기술 확보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R&D의 혁신도 중요하다. SCI 논문건수 위주의 평가를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장롱특허도 최소화 하여 R&D의 질적 수준부터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 R&D 투자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중장기 기술개발투자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사업별로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플래그십프로젝트, 징검다리프로젝트 등 정부와 민간의 R&D활동을 연계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40개 전문연구기관이 단일한 창구를 통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하는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대학, 출연연을 기업지원의 허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기업 확대, 창업엘리트 기술창업교육도 강화하여 연구개발 특구, 과학기술특성화대, 출연연의 기술창업을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것이다.

우리 방송시장도 新서비스 도입 등을 통한 활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UHD(Ultra High Definition) 기술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료방송 상용화를 이루어낸데 이어 올해는 지상파에 도입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콘텐츠 확보를 위해 9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1월부터는 EBS를 통해 다채널방송(MMS, Multi Mode Service) 시범 서비스도 실시된다.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제공 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정보·광고 제공) 등 스마트미디어 육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실감미디어, 공간미디어 등 미디어 기반기술을 개발하여 R&D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 미디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미디어 벤처에게 멘토링과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통해 미디어 서비스 상용화도 활발히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주춤한 한류의 재도약을 위한 콘텐츠 해외진출 역량도 강화한다.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과는 한·중 FTA후속조치로서 ‘시청각물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평요우(朋友) 프로젝트’를 통해 방송 및 디지털콘텐츠 교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교적 꾸준히 한류를 유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에는 드라마, K-pop에서 나아가 패션·뷰티·음식 등 ‘新한류콘텐츠’를 홈쇼핑, IT솔루션 등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도 강구하는 등, 단순히 문화콘텐츠의 해외수출을 넘어 ‘코리아 브랜드’의 판매와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는 파급력을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단 콘텐츠뿐만 아니라, 올해는 전세계 GDP의 73%까지 확대된 우리 경제영토를 적극 활용하여 각 산업 분야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골든 타임이기도 하다. 지난 1년간 중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FTA 발효에 대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우선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하여 무역협회에 ‘China Desk’ 및 전국 세관에 ‘한·중 FTA 세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FTA규정 해석, 중국

시장 동향 제공, 통관애로 해소 등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주요 권역에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 유통망 및 로컬 유통망과 연계하여 우리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도 지원한다. 농수산식품, 소비재 등 한·중 FTA 유망 품목을 선정해 시장진출 전략 안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도 돕는다.

이처럼 중국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권역과의 FTA 플랫폼은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과 결합해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제공한다. ‘Made in Korea’ 프리미엄의 활용을 원하는 중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중국 대비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주여건과 제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제3국 기업의 중국향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R&D, 창업, 물류, 문화콘텐츠, 금융 등 각 분야에서 기존 인프라와 FTA 플랫폼 효과를 연계해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자유구역, 새만금 등 경제특구의 규제완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투자매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FTA 미활용기업에 대한 안내 및 컨설팅 지원, 농수산·생활용품 등 FTA 활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한 특화된 지원,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신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지난해 60.4%에서 올해 65%까지 높이고자 한다. 이 외, TPP, RCEP 등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ASEAN, 인도 등과의 기존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남미 등 신흥국과의 FTA를 위한 조기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FTA 외에도 ‘정상외교’ 성과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기 순방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 창출과 유망 신흥지역과의 정상외교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 정상 방한 초청, 고위급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 등을 통해 UAE 원전운영계약,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등 올해 10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추진하고, 유망 신흥지역과의 정상외교를 강화하여 에너지인프라 및 공공분야 진출 확대는 물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사전기획, 민관공동 의제 발굴 등으로 성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합동으로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외진출 성공사례와 지원정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정상외교 성과의 공유와 확산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ICT 등 해외진출 분야를 다양화하고 진출방식도 제3국 공동진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해외진출 기회 확대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 각종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활용한 일자리 제공 등 1만2천명 규모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더불어, 경쟁력을 갖춘 우리 내수기업들의 수출기업화도 촉진한다. 수출 잠재능력을 지닌 유망 내수기업 2,400여개社를 발굴하여 100여명의 무역·기술분야 전문 PM이 밀착 지원하고, 수출지원기관과 협업하여 8개 기관의 23개 지원사업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와 FTA를 활용하여 소비시장 진출 및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확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최고 수준의 ‘통합무역정보(TradeNAVI)’도 제공한다.

이처럼, 2015년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다져나감으로써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혁신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할 시기이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 각 부처도 벽을 허물고 적극 협업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 올 한해는 창조경제타운과 혁신센터 등을 통해 6천여건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우리 창업 환경도 지난해 세계 17위에 이어 15위권까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넓어진 경제영토의 전략적 활용으로 수출 6천억불, 외국인 투자유치 2백억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집중되어야 할 때이다.